

제233회 임시회 시정질문·답변

시정질문과 답변내용(일괄질문·일괄답변)입니다.



조원휘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



“대전의 미래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조원회의원

● 조원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 조원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해 나갈 특별시 대전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대전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선도해 나갈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필요한 당면과제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대동 · 금탄지구 융복합산업단지 조성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부응하면서 대전을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조성하기 위해 4대 전략 24개 과제를 담은 육성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그중 유성구 대동 · 금탄동 일대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갈 R&D 거점지역이자 산업집적지구인 4차 산업혁명 전용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대동 · 금탄동 국가산업단지는 융복합 R&D사업화지구에 원천소재개발센터, 빅데이터 처리센터, 융복합플라자 등을 유치하고, 스마트 융복합산업단지에는 3D프린팅 소재산업 유치와 바이오헬스산업 등 IT, BT를 특화한 스마트 융복합단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장께서는 대동 · 금탄지구 270만 제곱미터에 약 1조 3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면서 과학기술정통부와 국토교통부, 특구재단, LH 등과 협약을 맺는 등 개발 계획 수립과 사업추진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동·금탄지구 국가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에 본 의원을 비롯한 대동·금탄동 주민들은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볼 때 대동·금탄지구 국가산업단지를 대전시가 계획한 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극복해 나가야 할 난제들이 많아 보입니다.

대동·금탄동지역은 지난 2009년도에는 첨단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복합산업단지로, 2011년에는 대덕특구 2단계 개발사업 변경계획을 통한 첨단산업단지로 검토되었던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대동·금탄동지역은 이미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모두가 그린벨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환경평가에서도 1~2등급지가 광범위하게 산재되어 있어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한 그린벨트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환경평가 2등급 지역인 동시에 경지정리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농지전용 협의 시에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척 의견이 예상되는 등 협의가 매우 어려웠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범위하고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환경평가 1~2등급지를 제척할 경우 사업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 사업시행자가 사업 참여를 기피함으로써 결국엔 사업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볼 때 현재도 이런 상황에는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동·금탄지구가 대전시의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을 위한 스마트융복합 첨단과학산업단지로 대통령 공약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시장께서 대동·금탄지구가 조속히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농지전용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시장께서 갖고 계신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추락위기에 놓인 대덕특구의 위상 강화 방안입니다.

얼마 전 언론상에서 우리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와 국가수리과학연구소를 타 지역에서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대전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해당 연구기관의 의사와 무관하게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의 일방적인 요구사항이거나 해당 기관의 무리한 요구인 것으로 밝혀졌지만 우리 대전의 입장에서는 그리 기분 좋은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타 지역에서 대덕특구 내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분원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올초 미래창조과학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덕특구 내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대전 외 다른 지역에 설치한 분원은 57개로 현재 건설 중인 7개를 포함하면 총 64곳의 분원이 설치·운영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전국적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분원이 우후죽순 식으로 설치되면서 과거 주로 우리 대전에서 이루어졌던 정부 R&D사업과 사업예산들이 전국 각지로 분산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분원 설치에 따른 연구인력의 분산은 결국 연구원들의 상대적인 처우 저하뿐만 아니라 연구기능마저 저하시키고 있어 국가적인 연구역량마저 퇴보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정치적 논리와 타 지역에서의 대덕특구 흔들기 시도 등으로 인해 우리 대덕특구의 위상은 더욱 추락하게 될 것이며 연구원들의 사기도 크게 저하될 것입니다.

이렇듯 타 지역에서 대덕특구 내 출연연구기관의 본원 이전 및 분원을 유치하려는 시도와 함께 대덕특구의 위상을 흔들기 위한 시도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락하고 있는 대덕특구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추락하고 있는 대덕특구의 위상을 증진시키고 떨어진 출연연구기관 연구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현재 유성구 도룡동에 위치하고 있는 목원대학교 소유의 대덕과학문화센터를 대전시가 매입하여 지역 과학기술계가 요구해온 융합공동연구센터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덕특구의 대표적인 과학교육공간이었던 대덕과학문화센터는 몇 해 전 서울의 부동산 개발업체가 주거와 사무용 복합오피스텔로 재건축하려 하자 대덕과학문화센터가 갖는 대덕특구의 상징성과 주변경관 훼손 문제, 교통혼잡 문제 등을 우려하는 대덕특구 내 과학인 단체와 지역주민들로부터 심한 반대에 부딪혀 왔었습니다.

다행히 최근 목원대학교와 사업시행자 간에 계약해지가 내려진 만큼 본 의원은 이번 기회에 우리 대전시가 대덕과학문화센터를 매입하여 과학기술인들을 위한 융합공동연구센터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융합공동연구센터는 대전시가 추진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성과물들의 테스트베드 역할과 함께 핵심기술 개발 및 성과 확산을 위해 대덕특구 내 출연연구기관과 민간연구기관들이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교류 및 소통의 플랫폼으로 활용돼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시장께서는 대덕과학문화센터를 매입하여 대덕특구 내 과학기술인들을 위해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는 매입비를 포함한 680억 원의 사업비 중 280억 원의 국비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국비확보를 위해 진행된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국비 확보가 무산되더라도 대덕과학문화센터가 갖고 있는 상징성과 대덕특구 내 과학기술인들의 위상 강화를 위해 대덕과학문화센터를 전액 시비로 매입하여 융합공동연구센터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플랜더스파크의 성공적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들어 반려견과의 교감을 통해 심신질환이 치유되는 사례가 과학적으로 입증되면서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확립과 함께 반려동물 전용공원을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전국의 지자체들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 3곳, 경기 6곳, 울산 1곳, 전북 1곳 등 총 11개소의 반려동물공원이 전국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전도 반려동물과 주인이 함께 할 수 있는 공원과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반려동물 테마파크 일명 플랜더스파크를 유성구 금고동에 조성할 계획을 갖고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19대 대선공약 중 반려동물지원센터를 일과성 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동물보호 관련 국비지원정책이 변경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미 배정된 경기, 울산, 의성 등의 반려동물문화센터 지원마저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대전도 정부방침이 변경됨에 따라 반려동물공원 조성을 위한 국비 확보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고 그 결과 막대한 시비가 투입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지역주민들은 벌써부터 반려동물공원 조성사업이 무산될까 큰 걱정과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당초 대전시는 반려동물공원을 조성하면서 유성구 갑동의 반려동물복지센터를 금고동으로 이전시키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지역주민들은 반려동물공원 조성을 전제로 반려동물복지센터 이전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였던 것입니다.

만일 정부 방침의 변경으로 금고동에 조성될 반려동물공원이 축소·변경되거나 무산된다면 이미 이전이 확정되어 있는 대표적인 혐오시설인 반려동물복지센터 입지를 지역



주민들은 절대로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님, 그렇지 않아도 이미 이 지역 주변에는 쓰레기매립장, 자원순환단지, 송유관 공사 위험물저장시설 등 혐오시설이 밀집해 있는데 또 다른 혐오시설인 반려동물복지센터가 입지한다면 어떤 주민이 좋아하겠습니까?

시장께서는 현재 정부 방침이 변경된 상황에서 대전시 반려동물공원 조성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며, 국비 확보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대전시가 정부로부터 국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전액 시비를 들여서라도 당초 대전시가 계획하고 주민들에게 약속한대로 반려동물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과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단지, 제2매립장 등 환경혐오시설이 집중되는 구즉동 인근 지역의 주민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표적 기피시설 중 하나인 자원순환단지, 제1매립장, 제2매립장, 하수처리장, 반려동물복지센터 등의 인근지역 주민지원 대책에 대해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도시 내 기피시설의 특정지역 집중현상은 또 다른 기피시설의 입지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현재 구즉동 일원이 그러합니다.

제1매립장에 이어 자원순환단지 조성, 제2매립장 확충 그리고 하수처리장 이전 입지, 반려동물복지센터가 그 예입니다.

이 지역의 경우 이미 대덕산업단지의 공단에서 배출되는 악취,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물질로 인하여 삶의 질이 저하되고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전체가 환경혐오시설로 둘러싸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지원사업의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이기도 합니다. 물론 환경피해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대덕산업단지 등 공단에 인접한 곳에 주거지역을 조성했기 때문입니다.

주거단지를 조성할 때부터 이미 환경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예견된 것이었지만 도시계획상 그곳에 주거단지를 조성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주거단지가 조성된 이상 주민들이 환경피해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전시의 의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생활폐기물의 대부분을 처리할 예정인 자원순환단지는 어느 지역에 있든지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는 분명하지만 처리장 인근 주민들은 이런 잠재적 위해시설 때문에 건강·경제적 손실 등의 위험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쩔 수 없이 수반되는 물적·심리적 건강피해에 대해서는 반대급부를 주어야 함은 당연하고, 도시 전체 차원에서 부담과 이익이 공평하게 분담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정책결정자인 시장님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협오시설 입주로 인해 하락하는 부동산 가치와 지역 이미지에 대한 보상은 불가피한 선택일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고통받고 불이익 당하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시장님, 구즉동 인근 목상동의 경우 소각장 가동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소각열을 목상동지역에 전액 무상으로 난방열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2월 자원순환단지에서도 200톤 이상의 소각로가 가동예정인 만큼 인근 지역인 구즉동 일원에도 이에 준하는 난방열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며, 주민복지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이 지역에 필요한 공익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대전시가 추진하는 정책들로 인해 단 1명의 주민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이 가득한 대전을 건설하기 위한 방안들이 활발히 논의되었기를 기대하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장 권선택

조원회 의원님께서 대동·금탄지구 용복합산업단지 조성방안, 대덕특구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원 사기진작 방안 등 5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과 주민지원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다해 주시는 조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동·금탄지구 용복합산업단지의 조속한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농지전용문제 해결방안이 어떻게 됐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동·금탄지역은 개발이 지연돼서 많은 주민들이 걱정이 많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우리 시는 대동·금탄지역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거점지구로 조성하기 위해서 대통령 공약 반영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지난 7월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4차 산업혁명 성장거점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인 사업시행자를 확보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농지 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LH와 함께 중앙정부를 설득 중에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세종시의 팽창 및 인근 신동·둔곡지구 과학벨트 조성으로 인해서 과거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첨단녹색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던 시기에 비해서 개발여건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현재까지는 긍정적인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 농지 전용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해당 부처와 협조하고 설득해서 대동·금탄지구를 4차 산업혁명의 거점지구로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타 시·도의 대덕특구 정부출연 연구기관 본원 이전 및 분원 유치 등 위상 흔들기에 대한 대전시의 대책과 대덕특구 종사 연구원들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파악한 바로는 대덕특구 내에 정부출연 연구기관 26개 중 17개 기관이 전국에 44개 분원을, 건설 중인 것을 포함합니다,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분원 이탈방지를 위해서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대책을 촉구한 결과 2016년 9월 출연연 분원 설치·운영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분원 유치 시에 해당 자치단체가 부지 및 건물을 제공해야 하고, 운영비 50%를 부담해야 하는 등 분원 설치 요건이 강화된 바가 있습니다.

분원 평가기준도 강화돼서 2017년 6월 1개소가 폐쇄조치되었고, 최근 신규 분원 설치 움직임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앞으로도 분원 설치 움직임에 적극 대처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R&D 기지로서의 대덕특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는 대덕특구 종사 연구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과학기술인 후생복지 시설 및 커뮤니티 공간을 확충하고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과학사랑 음악회, 원도심 탐방 등 대덕특구와 스킨십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공통과제를 함께 헤쳐나가기 위해 대덕특구와의 소통과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과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교류 및 소통 플랫폼으로서 대덕과학문화센터를 매입하고 융합공동연구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2004년 이후에 13년간 방치되고 있는 대덕과학문화센터를 매입하여 대덕특구 융합공동연구센터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센터는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산학연 융합공동연구공간, R&D 테스트베드, 창업보육 및 과학기술인 커뮤니티 등 복합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학술용역비로 국비 2억 원이 내년 예산에 계상되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 정밀 안전진단, 타당성 조사, 설계용역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조성을 위해 전담 조직과 위원회를 구성하고 실행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대덕특구 융합공동연구센터 등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조성 실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정부의 동물보호정책 변경에 따라서 대전시의 반려동물공원 조성 국비 확보 방안과 국비 미확보 시 대전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반려동물산업은 반려동물 사육 인구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모든 지자체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도 2015년 2월 동물보호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해 유성구 금고동 일원에 반려동물공원 일명 플랜더스파크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정책 방향이 반려동물문화센터에서 반려동물지원센터로 전환되어 우리 시도 일부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시는 반려동물지원센터 사업이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어 관련 산업 육성의 호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지역주민들이 환영하는 반려동물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원순환단지, 제2매립장 등 환경혐오시설이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내년 2월 가동 예정인 자원순환단지 인근에 있는 구즉동 주민 지원대책이 무엇인냐고 물으셨습니다.

유성구 금고동은 매립장, 음식물처리장, 자원순환단지 등 폐기물 처리시설이 집적화 되어 있어서 악취 등의 피해로 인한 지역주민 분들의 고통을 시장인 저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매년 26억 규모의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금고동에 자원순환단지가 준공될 예정으로 준공 이후 구즉동 등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조사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환경피해 여부 및 그 결과가 밝혀지므로 이에 따라서 주변지역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2매립장 건설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복지커뮤니티센터 등 주민편익시설 확충에도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충질문(조원회 의원) 및 답변(대전광역시장 권선택)

● 조원회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시장님께 듣고 싶은 답변 중 다소 미흡하고 애매한 답변이 있어 몇 가지 사안에 대해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덕과학문화센터 매입 및 활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장께서는 대덕과학문화센터를 위해 학술용역비를 위한 국비 2억 원은 반영되었고 앞으로 센터의 정밀진단용역, 타당성 조사, 설계용역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시장께서는 대덕과학문화센터 매입을 위해 정밀진단용역, 타당성 조사, 설계용역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 이후에 국비를 확보해 나가겠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국비 확보 노력과 함께 관련 절차를 진행하시겠다는 것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만일 국비가 확보되지 못했을 경우 대덕특구 내 과학기술인들의 사기 진작과 함께 교류·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해 대덕과학문화센터를 전액 시비를 들여서라도 매입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시며, 전액 시비를 들여 매입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플랜더스파크 즉 반려동물공원 조성과 관련된 보충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정부의 반려동물문화센터 사업이 반려동물지원센터 사업으로 추진방향이 바뀌어서 우리 시도 일부 사업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사업계획을 변경한다는 말씀이 플랜더스파크 조성사업을 축소시킨다는 의미이신지 아니면 어떻게 변경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일 플랜더스파크 조성사업의 축소 등 당초 대전시가 주민들에게 제시하고 약속한 계획이 변경되고 지역주민들이 기피하는 동물보호센터가 플랜더스파크 조성 이전에 먼저 들어오게 된다면 지역주민들로부터 또 다른 저항을 받을 것이 불 보듯



뻘한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자원순환단지 소각로 가동에 따른 구즉동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년 2월 자원순환단지에서 200톤 규모의 소각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인근 목상동 사례처럼 주민지원사업으로 구즉동 일원에도 무상으로 난방열을 공급할 것인지 시장님의 구체적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중에 26억을 폐촉법에 의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구즉동, 원래 원주민들한테 지원되는 것은 약 10억밖에 되지 않고요.

목상동은 그 지원 외에 추가로 소각로에서 나오는 열 때문에 또 무상으로 난방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즉동, 송강동 일원은 이 10억을, 지원되는 것의 1원 한 푼도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송강동 일원에 소각열 공급과 관련해서 난방열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전광역시장 권선택

조원회 의원님께서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덕문화센터에 대해서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13년간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대전시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좋은 시설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4차 산업혁명을 이용한 좋은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융합공동연구센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융합연구공간, R&D 테스트베드, 과학기술인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정부에 제안을 해놓고 있습니다.

약 68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고 4백억이 매입비, 180억 원은 리모델링비용, 1백억은 장비 구입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입비 4백억 원은 대전시 자금으로 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이번에 정부가 반영한 것은 2억 원의 학술용역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행이 되면 그에 대한 큰 그림이 그려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시에서도 안전성 연구용역, 정밀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도 계상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안들이 함께 병행해서 추진되어야만 빠르게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 건물 자체가 쟁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적절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이 시설이 대덕특구로 봐서도 그렇고 제4차 산업혁명 특별시를 운영하면서 매우 중요한 거점이 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를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반려동물문화센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큰 정책방향이 좀 바뀌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지원센터로 정책방향이 바뀌어서 정책적인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정부의 정책변화를 감지해서 우리 나름대로 능동적인 대책을 꾸려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센터가 있고 플랜더스파크가 있는데 함께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시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의견 수렴도 하고 중앙정부와 의견 조율이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축소할 것인지 전체를 다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 아니냐, 검토를 하고 있고요.

내부 검토가 끝나면 의회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합리적인 선택과 합리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자원순환단지에 대한 주민지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고형연료 전용보일러가 가동이 되는데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가연성 연료를 분류시키고 건조시키고 소각과정을 거치는 그런 시스템화되어 있는 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종전에 했던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전처리시설 없이 소각하는 소각로와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행 법규상에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주변 환경영향조사를 실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따른, 난방열 아까 지원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다각적인 주민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로써는 내년도에 이런 것을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결과에 충실하게 지원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